

열린세상



서미애
논설실장 겸 국장

“어디 사십니까?” “어느 아파트에 사세요?” “우와, 좋은 데 사시네요.”... 광주에서 현대 아이파크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대기업이 지은 값비싼 아파트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대라는 국내 최대 건설회사가 명품으로 튼튼하게 잘 지었을 것이라는 믿음이 크다. 그러나 이제 아니다. 전 국민에게 아이파크라는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한순간에 ‘참 나쁜 기업’이 돼 버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대산업개발은 우리 시민들에게는 참 나쁜 기업이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학동 참사 후 217일 만에 있어서는 안 될 붕괴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보인 노력은 매우 실망스럽다. 11일 사고가 발생했는데 12일 자정이다 되어서야 대표이사가 광주에

왔고 13일 오전 10시 한 장짜리 사과문을 냈다. 이것이 전부였다”고 비판했다.

현산 잇단 대형사고

대개 ‘고향집’ 하면 따뜻한 정을 떠올린다. 집이란 가족끼리 오붓하게 아끼고 사랑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현대인에게 행복이나 화목 같은 등 정신적 가치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생활공간으로서 집의 의미는 많이 빛바랬다. 상당 부분 재산 증식 욕망이 반영된 투기의 대상으로 변했다. 실제로 아파트는 환금성과 재산 증식 효과가 가장 뛰어난 자산이다. 이렇다 보니 너도나도 비싼 아파트를 선호한다. 수십 년 살던 주택을 팔고 아파트로 이주한다. 중대형 아파트에 살더라도 신축 아파트에 관심을 기울인다. 재산을 늘릴 생각에서다. 우리들의 민낯이다.

붕괴사고가 난 광주시 ‘화정 현대 아이파크’는 고층인 데다 광주에서 가장 ‘핫’한 주거공간으로 꼽혔다. 분양 당시 당첨만 되면 ‘로모’라는 말이 나왔다. HDC현산이 2019년 5월 분양된 ‘화정 현대 아이파크’는 지하 4·지상 39층, 8개 동으로 분양가는 3.3㎡당 평균 1.632만 원이었다. 광주에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청약 당시 경쟁률은 2단지 84㎡(B)형의 경우 108 대 1을 기록했을 정도로 인기였다. 올해 11월 입주예정인 이 아파트는 분양 2년 만에 최고 5억 원의 웃돈이

붙었다. 최고 분양가, 최고 프리미엄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제 ‘폭망’이 됐다.

아파트 구조물이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다. 우리 지역에는 지난 1970년 4월 서울의 와우아파트 붕괴사고나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생생하다. 산업화 과정에서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 일어난 사고라고 치자. 하지만 다시 2022년 1월, 국내 굴지의 건축회사가 시공한 아파트건설공사장이 다시 무너졌다.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체면도 땅에 떨어졌다. 아파트 구조물이 무너질 때 인근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더라면 어땠을까 상상하기조차 무섭다. 그동안 공사장에서는 구조물이 떨어진다든 민원인 수차례 제기됐지만 넘어갔고 시공사인 HDC현산은 공사 감리에 소홀했다.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다가 23~38층부터 23층까지 무너지는 동영상은 불과 7개월 전 광주시 학동 5층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무너지면서 시 내버스를 덮친 사고와 겹쳐진다. 철거할 때도 무너지고, 신축할 때도 무너지는 셈이니 한숨만 나올 뿐이다.

광주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광주학동참사 시민연대’는 최근 성명을 내고 “HDC현산은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광주에서 떠나라”고 외쳤다.

예비입주자들의 기대감은 ‘와르르’ 무너졌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광주 지역 온

라인 커뮤니티엔 ‘화정 현대 아이파크의 위업’이라며 공사 현장 사진이 됐다. 글쓴이는 “화려함에 정점을 찍었다. 분양 당시 분양가에 놀랐지만, 현재 광주 시세로 볼 때 충분한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라는 글을 남겼다.

시민들은 분노한다

하지만 붕괴사고 이후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커뮤니티 회원은 “이 아파트는 무조건 철거한 뒤 다시 짓도록 광주시민이 나서야 한다. 같은 방식으로 지은 단지이니 언제 무너지지 모르는 모래성과 같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예비입주자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에도 “무서워 살 수 없을 것 같다.” “씩 다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한다”고 외쳤다. “명품아파트”로 소문난 현대 아이파크는 이제 ‘무서운 아파트’로 전락했다.

HDC현산은 지난해 6월 광주시청 브리핑실에서 학동 붕괴 참사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후 현대산업개발은 법정에서 불법 하도급 사실을 인정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가 없었다. 모든 것이 빈말이었다. 이번에는 말로 철거한 수사로 위아래를 가리지 않고 처벌해야 한다. 건물 신축현장 사고에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기고



김미순
전남도 법무담당관

린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C씨는 한 정승인을 신청해 빛 상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우리는 보통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부딪힌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문제 해결의 시작인 법률상담부터 난관에 부딪히기 쉽다. 상담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은 경제적 부담이 법률 구제를 포기하는 주요 원인이 되곤 한다. 법률사무소가 맡길만한 도심으로 이동하는 데 불편이 따르는 도서 지역과 무변촌(변호사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이 많은 지역 현실도 도민들이 원활한 법률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한 요인이다.

이러한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 법률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남도는 무료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전까지는 도내 시군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법률강의 및 상담’을 지원했다.

2020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각종 법적 분쟁이 대폭 증가하였으

나 기존 대면 상담이 불가능하게 되어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민들의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전화, 홈페이지, 채팅 상담 등 비대면 상담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이용활성화에 노력했다. 또 지난해에는 시군에서 활동하는 전문변호사 6명을 추가로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하여 총 15명의 전문상담관이 신속하고 안정적인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몰라서 이용 못하는 도민들을 위해 포스터, 카드뉴스, 방송 및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으며 이용률이 대폭 늘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315건의 도민의 법률문제 해결을 도왔다. 이는 2020년 대비 20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2020년 100건).

전월세 임대차 계약 및 해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이 가장 많았고, 그밖에 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는 원활한 법률서비스 제공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찾아가는 전남행복서비스’로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대면 상담을 제공하고, 도내 다문화가족에게는 외국어 통·번역사 및 상담사를 통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군 가족센터와 연계하여 도내 다문화가족이 겪는 법적 문제와 언어의 이벽 등을 해소하고, 국제취득·인권·가정폭력 등 여러 분야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전반적인 다문화가족의 권익 증진이 기대된다.

더불어 사례중심의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노인·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단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받는 도민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임인년 새해에는 법률문제에 부딪힌 도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결해주어 도내 법률서비스 사각지대가 점차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현대산업개발은 참 나쁜 기업이다”

사설

‘붕괴참사’ 광주시 단호 조치 ‘선례’ 돼야

“공사 중단 행정명령이 내려진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5곳 현장에서 확실한 안전성 확보 없이 공사가 재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특히 붕괴 사고 현장은 전문가들과 철저히 점검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서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잇달아 단호한 조치를 내놓아 주목된다.

이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일정 기간 붕괴 아파트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는 자치구별로 지정된 감리단으로 현장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고 시 차원에서 첫 공공감리단 제도를 도입해 일정 규모 사업장 안전을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잇따른 붕괴 사고 시공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광주시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

례이며, ‘선례’를 남겨야 한다. 앞서 300여건의 주민 민원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사업 허가권자 서구청이 사고 이후에도 주민 대피와 숙박 지원 등에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광역단체인 광주시가 전면에서 나서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붕괴 참사와 관련한 일련의 대응 과정은 하나의 매뉴얼로 만들어져 이 지역뿐 아니라 전국 다른 지자체에도 유용한 자료가 되게 해야 한다.

지금은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들에게 대한 수색이 먼저지만 공사 현장에서 언제라도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만큼 대응체계를 철저히 세워놓아야 한다. 시공사에 대한 처벌은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해가되 행정당국과 감독기관의 관리 부실, 미숙한 민원 대응 등에 대해 책임을 묻고 사고 이후 조치 등을 단호하고 엄중히 내리는 과정을 체계화해야 한다.

금리인상 서민들 이자부담 크다

한국은행이 14일 기준금리를 기존 1.0%에서 1.25%로 0.25% 포인트도 인상했다. 2020년 5월 사상 최저 수준인 0.5%까지 낮춰진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인상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번 금리인상을 충분히 예고해왔다. 이 총재가 매파적 금리인상 공세를 펴는 가장 큰 이유는 물가 때문이다. 한은은 물가안정에서 존재 이유를 찾는다. 물가가 뛰면 특히 서민이 힘들다. 잇단 금리인상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금리인상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긍정적이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은 저금리 기조가 집값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뒤집어 말하면 금리인상은 집값을 끌어내리는 효과도 탁월하다는 뜻이다. 마침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4일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179.9로

전월비 0.79% 하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리인상이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빚쟁이들에게 금리인상은 그 자체로 공포다.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시한폭탄이다. 지난해 9월 기준 가계부채는 약 1845조 원에 이른다. 시중금리가 딱 0.75% 포인트만큼만 올라도 추가 이자부담이 10조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코로나 방역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도 금리인상이 반갑지 않은 마찬가지다.

물가와 부동산만 보면 금리인상은 올바른 방향이다. 이 총재의 적극적인 선제 대응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금리는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뜩이나 힘든 서민이 이자 때문에 허리가 굽고 타락한다는 뜻이다. 마침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4일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179.9로

되풀이되는 안전사고 강력한 처벌 필요

기지수첩

HDC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붕괴참사에 이어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를 일으키면서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이번 사고 역시 안전은 도외시한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고 무리하게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사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현재 시공 중인 광주 시내 현장은 지난해 6월 철거 중 붕괴사고가 발생한 학동 재개발 4구역과 이번 서구 화정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동구 광주계림 아이파크SK뷰 아파트, 광주 운암3단지 등 총 4곳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27일 시행될 예정이라 경영진까지 구속될 수 있는 법적 처벌은 피할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총체적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판과 책임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이번 사고가 시행일 이후에 일어난다면 조사 결과에 따라 현산의 처벌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원장인 현대산업개발 측의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법 제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원형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달리 하도급을 수수해 실제 공사를 진행한 개별 기업의 사용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했기 때문



최환준
사회부 차장대우

이다. 현재 부실 공사 등에 따른 처벌 기준은 국토부의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설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산업법) 등 크게 3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처벌 규정에 따라 사고원인 조사에서 부실시공 등이 판명될 경우 최장 1년 영업정지가 가능하지만, 주로 현장 책임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이번 사고가 시행일 이후에 일어난다면 조사 결과에 따라 현산의 처벌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원장인 현대산업개발 측의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법 제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원형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달리 하도급을 수수해 실제 공사를 진행한 개별 기업의 사용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했기 때문

특지광장

정치·사회적으로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가고 새해가 밝았다. 매일 똑같은 해가 뜨고 지지만 새해는 항상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하는 ‘선풍’이 있다. 새해 소망을 종이에 적고 한해를 계획해 보는 이유다. 아마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새해소망 첫 번째를 꼽는다면 단연 ‘코로나19 종식’이 아닐까 싶다.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사

작심삼일은 이제 그만! 스마트하게 극복하자

람들과 마음 놓고 만나는 코로나 이전의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은 것 같다.

물론 각자 이루고 싶은 개인적인 새해 소망들도 많이 있다. 이를테면 ‘올해는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 ‘영어를 반드시 정복하고 말테야’ 같은 것들 말이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다른데 있다. 항상 새해를 맞이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오래가길 바라지만 ‘작심삼일’에 그친다는 것이다.

작심삼일, 마음먹은 지 삼일이 못 간다는 뜻으로, 새해 결심이 얼마 되지 않아 흐지부지 되는 경우를 빗댄 말이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새해 소망을 SMART하게 세워야 한다.

SMART는 목표 달성 기법 중 하나로 영문 첫 글자를 따서 S.M.A.R.T.라고

흔히 불린다. 즉, 목표는 Specific(구체적이고), Measurable(측정 가능하며), Attainable(실현 가능하고), Realistic(현실성 있고), Time limited(기한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새해 소망으로 막연히 ‘영어 정복하기’ 보다는 ‘매일 영어회화 1시간 이상 공부하기’가 더욱 좋은 목표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새해소망, 더 늦기 전에 스마트하게 바꿔 보는 것은 어떨까.

/김학수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3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신고 182	▲인광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수도 고장신고 121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전기고장 신고 123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응급의료센터 1339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판)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편집국장 姜聲秀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정 치 부 (062) 720-1060-62	경 제 부 (062) 720-1066-67	사 회 부 (062) 720-1050-53	사 회 2 부 (062) 720-1043	동 부 권 본 부 (061) 743-4200-01	문 화 부 (062) 720-1071
사 회 1 부 (062) 720-1040	기 획 팀 사 부 (062) 720-1045-46	편 집 부 (062) 720-1073	논 설 실 (062) 720-1006	전 산 실 (062) 720-1033	필 간 국 (062) 720-1007
판 매 국 (062) 720-1004	사 업 국 (062) 720-1011,1099	광 고 국 (062) 720-1016-17	관 리 국 (062) 720-1012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98 (사동)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